

축산식품 자급률 목표 상향조정

농림수산식품부가 설정한 2015년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07년에 제시된 것으로 자급률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여 설정하기로 했다. 2015년 축산분야 자급률은 조사료 85.0%, 우유 및 유제품 65.0%, 쇠고기 46.0%, 돼지고기 81.0%, 닭고기 80.0%, 계란류 100%로 특히 이중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자급률이 낮게 설정돼 자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에 출석, '식량 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료와 조사료 등도 국제곡물 수급상황 등을 감안, 별도의 자급률 향상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 장관은 이날 보고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07년에 추세치를 감안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새로 점검하여 최대 목표치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특히 기존의 식량자급률 개념을 개방화 등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게 전환, 국내외에서의 확보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국가식품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그러나 이날 여야의원들의 식량자급률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식량자급률'과 관련, G7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라며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어 장 장관은 '한·EU FTA 대책'과 관련, 한·EU FTA 체결로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국내 축산업을 체질이 강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관세 감축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EU FTA에 대비, 조기대응이 필요한

사업예산 958억원 가운데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296억원, 전문원종돈장 60억원 지원, 모돈전문농장 20억원 지원, 소모성질한백신 지원비 9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강한 축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유통의 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 △축산물 수급안정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 한·EU FTA 협정문 정식서명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쿼터 감축 피해보전 직불금 도입을

낙농육우협회가 전국순회낙농인대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낙농가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가)한국낙농발전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7가지 FTA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12월 1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호 회장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미국, EU를 비롯해 낙농대국들과의 FTA 발효 후 한국 낙농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될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 2007년 정부가 제시했던 내용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FTA로 인한 농가 쿼터감축과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과 중장기적인 낙농산업 비전을 제시하는 올바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낙농육우협회는 FTA 대책으로 7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생산자위원회 설치와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생산자 위주의 생산자위원회 설치시 유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협의체로

‘(가)한국낙농발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현재의 낙농진흥회 역할과 함께 낙농산업발전 방안 마련, 원유가격 조정·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생산자위원회의 설치는 생산자들이 원유 공급을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쿼터관리를 위한 중립 및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농가들에게 공정한 쿼터를 배분하고 유업체와의 대등한 거래 교섭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원유수요가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생산자들 사이에서도 유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낙농문제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낙농선진국들과의 FTA로 인해 국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낙농가들의 쿼터도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쿼터 감축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농가 폐업에 따른 폐업지원금과 함께 영세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생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쿼터 बैं크’ 운영 방안과 관련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신규진입 농가와 더불어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신규진입 농가에 대해서는 1톤을 기준으로 50%는 무상, 50%는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농가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톤 이하의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쿼터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섯 번째로는 FTA로 인해 국내 유제품 시장이 값싼 외국 유제품들로 인해 잠식당할 우려가 높은 만큼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국내 자연치즈 시장 규모가 연간 5만 5천톤에 달하지만 이중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만톤

에 불과하다며 ‘치즈기금’ 설치를 통해 치즈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유 공급 과잉시를 대비해 생산자위원회 산하에 분유가공공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낙농제도개혁 정부 확고한 정책의지 표명해야

낙농제도개혁과 관련 정책당국과 생산자단체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보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2월 16일, 17일 양일간 대전 유성소재 레전드호텔에서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도자대회에서 영남대 조석진 교수는 ‘FTA와 낙농제도 개혁과제’란 특강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조석진 교수는 최근 논의 중인 낙농제도 개혁 방향과 관련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쿼터제와 관련 향후 협동조합, 유업체, 진흥회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는 쿼터를 단일쿼터로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구성원간 동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EU 등과 FTA가 발효될 경우 전개될 수 있는 시장상황에 대해 낙농구성원들의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이해주체별로 처해있는 여건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황인식에도 차이가 있어 제도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FTA 파고를 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제도개혁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쿼터 소각을 포함한 확고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낙농가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이 포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들의 제도개혁 과정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강제적이고 전격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며 현재 정부가 추

진하는 방향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 방식을 통한 제도개혁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낙농제도 개혁은 혁명이다"라며 "많은 신진국들이 낙농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낙농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조 교수는 "정부, 생산자, 유업체는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제도개혁의 조기실현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각 이해주체들은 하나를 더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를 잃더라도 제대로된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낙농제도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유지방 등급 축소 · 유단백 기준 신설”

현재 15개 등급으로 구분된 유지방 등급을 11개에서 13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유단백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중간결과가 나왔다.

충남대 박중수 교수팀은 12월 18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산정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팀은 그 동안 현재의 유대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유단백 기준을 포함시켜 11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놓고 유대산정체계 소위원회 등을 거쳐 농가들의 유대 수입에 가장 영향이 적은 3가지 시나리오를 최종 압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유지방 등급을 현행 15등급에서 11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유지방 기준율을 3.4%에서 3.5%로 0.1% 상향 조정하고 3.0%미만은 3.1% 미만으로 통합되며 4.1 이상은 4.0%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최고 181,28원의 인센티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유단백 3.2%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지방 기준율을 3.4%에서 3.5%로 상향조

정하고 하한 3.1%에서 상한 4.2%로 13개 등급으로 2개 구간을 축소하면 최고 181,28원의 인센티브가 절감되며 마찬가지로 이를 유단백 3.2%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지방 기준율 3.4%를 유지하고 상한을 4.0%로 통합하고 181,28원에 대한 부분은 유단백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유단백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 시나리오별로 3.2%를 기준으로 최고 23.71원에서 최저 15.45원을 고정시키고 구간별로 7,28원에서 14.2원까지 차등 적용하면 농가 유대 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중수 교수는 유단백 기준을 포함시켜 유대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유지방율의 변화에 따른 신유량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유단백율이 0.1% 증가할 경우 0.1산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지방율이 0.1% 감소하고 유단백질율이 0.1% 증가할 경우 당당 일일 사료비는 각각 108원과 178원이 감소해 연간 8천600kg 기준으로 3만천원에서 최고 5만천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원유산정체계 기준을 적용시켜 농가별로 유대수입에 대한 사물레이션 결과 현행 유대체계에 비해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전체 농가 평균 수취가격은 변화가 없으며 생산 규모 상위 40% 이내의 농가의 경우 오히려 추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양관리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사료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 자료가 미비하고 TMR 사료 배합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안 도입 전 1~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품종 개량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우선 사양관리 변화를 통해 적용한 이후 장기적으로 품종개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㉞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